

개혁종단의 한계와 과제

조기룡

동국대(서울)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I. 서언

II. 종교개혁과 개혁종단

III. 개혁종단의 한계

IV. 개혁종단의 과제

V. 결론

요약문

1994년 개혁불사는 개혁회의라는 혁명기구를 통하여 현재의 조계종 종단구조를 수립하고, 개혁종단을 출범시켰다. 이후 조계종에서 1994년 개혁불사와 개혁종단의 이념과 성과는 절대시 되어왔다.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 일반도였으며, 부정적 평가는 금기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는 개혁종단의 종단개혁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개혁종단의 한계와 과제를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맞는 종단운영의 풍토와 구조의 형성에 기여하는데 있다. 개혁종단의 한계로는 종책모임의 대두와 종단정치와 과잉, 종단개혁의 세속성, 승가의 갈등과 분열, 행정 중심 종단운영을 제시하였다. 종책모임의 대두와 종단정치와 과잉은 개혁종단의 출범과 함께 대두된 결과로 인하여 종단에 정치가 넘쳐나면서 종교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종단개혁의 세속성은 개혁종단이 지향한 민주화와 자주화가 종교조직이 아닌 세속 조직의 절대 가치라는 것이다. 승가의 갈등과 분열은 개혁종단이 인적 청산과 선거제도 정착에 천착하면서 승가에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행정 중심 종단운영은 개혁종단이 종교적 개혁이 아닌 행정적 개혁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개혁종단의 과제로는 종교적 정체성의 회복, 화합공동체의 실현, 비구니와 재가자의 참종권 확대, 종단조직의 재정비를 제시하였다. 종교적 정체성의 회복은 개혁종단이 제도개혁에서 나아가 승풍진작과 종풍쇄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화합공동체의 실현은 계파의 해체 또는 순기능 강화, 1994년 징계자 재심, 소유와 분배의 평등 등을 통하여 승가의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구니와 재가자의 참종권 확대는 비구 중심의 종단 운영에서 변화하여 비구니와 재가자가 종단과 사찰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종단조직의 재정비는 중앙기구를 현재의 행정 우위에서 수행과 전법이 우위에 놓일 수 있도록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개혁종단, 개혁회의, 개혁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계파, 종책모임, 종무행정

I. 서언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은 1994년 종단분규를 겪었다. 조계종에서는 이 분규의 과정을 개혁불사로, 이때 종단을 운영한 한시적 기구를 개혁회의라고 통상 지칭한다. 그리고 개혁회의에 의하여 출범한 조계종단 체제를 개혁종단이라고 부른다. 당시 개혁회의가 제·개정한 종헌·종법의 틀에서 조계종의 체제는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고가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혁종단은 1994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조계종을 총칭한다. 개혁종단은 출범 이후 조계종에서 그동안 절대적 정당성을 부여받아왔다. 개혁회의와 개혁종단을 탄생시킨 개혁불사는 서의현 총무원장 3선반대 투쟁운동에 의하여 촉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4.10 전국승려대회’가 열렸다. 현대한국불교에서 전국승려대회는 초법적 혁명운동으로 간주되었고, 이때 결의된 사항들은 당시의 종헌·종법을 초월하는 구속력을 행사해왔다. 4.10 전국승려대회는 3선반대를 지지하는 조계종도의 대중공의가 집단적으로 표출되어 종단의 운영 방향을 정한 개혁불사로 인정받고 있다. 이 같은 전국승려대회의 초법적 혁명성과 집단적 결정력이 개혁종단에 절대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력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래 들어 개혁종단의 체제와 운영에 대한 회의적·자성적 평가도 제시되고 있다. 개혁회의는 ① 정법종단의 구현 ② 불교자주화 구현 ③ 종단운영의 민주화 ④ 청정교단의 구현 ⑤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 등을 불교개혁 5대 지표로 제시했었다. 1994년 당시의 중도 요구가 반영된 개혁불사였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개혁회의가 선언했던 개혁 지표에 맞게 종단이 운영되지 못했다는 반성과 비판이 있는 것이다.

개혁종단이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다. 조계종은 2016년에 『종단개혁 20주년 기념 94년 종단개혁백서』를 발간하였다. 이 백서에 의하면, 조계종은 개혁종단의 성과로 ① 불교자주화 ② 종단운영의 민주화 ③ 정법종단의 구현 ④ 개혁 입법 ⑤ 3원 체제의 정립과 호계원의 독립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¹⁾

조계종이 개혁종단의 성과로 우선 평가한 ‘불교자주화’란 개혁종단이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종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한다. ‘종단운영의 민주화’란 총무원장 1인 권력에 의한 종단 지배 또는 소수에 의한 종단 운영 독점을 막았음을 의미한다. ‘정법종단의 구현’이란 개혁종단이 불교의 정법인 부처님 법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 입법’이란 개혁종단의 5대 지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헌·중법을 제·개정하였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3원 체제의 정립과 호계원의 독립’이란 교육원과 포교원을 총무원으로부터 독립된 별원으로 자리매김하였음과 종래 총무원의 산하기구였던 호계위원회를 사법부인 호계원으로 승격시킨 것을 지칭한다. 교육원과 포교원의 독립은 종교조직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호계원의 독립은 조계종이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상기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논자마다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개혁회의의 5대 지표와 개혁종단의 5대 성과에 대하여 상기의 내용 이외에는

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16, 234-240.

별도의 분석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금번 연구의 목적은 개혁종단의 현재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계와 과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지표와 성과에 대한 조사가 수반될 수도 있지만 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개혁종단의 한계와 과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 동안 조계종에서 긍정적 평가와 절대적 권위를 인정받아온 1994년 개혁불사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평가한다는 의미가 있다. 본고는 개혁불사와 개혁종단에 대한 긍정 일반도의 평가를 탈피하여 20여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한계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향후 과제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그 한계와 과제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본고는 개혁회의가 만든 종단 시스템으로부터 야기된 문제들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한국불교 전반으로부터 야기된 문제는 다루지 않고 개혁종단의 체제로부터 비롯된 문제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II. 종교개혁과 개혁종단

종교개혁을 논할 때 뺄 수 없는 인물이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다. 그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세속성을 혁파하고 종교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그 직접적 계기는 면죄부 판매였다. 당시 교황청은 극에 달한 사치와 성 베드로 사원을 신축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했었다. 교황 레오 10세(Leo X, 1475-1521)는 독일 마인츠의 대주교인 알버트(Albert, 1490-1545)가 제안한 면죄부 판매를 승인하였다. 면죄부의 교리 체계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공로가 많기 때문에 하늘나라 창고에는 잉여 공로가 쌓여 있으며, 교황은 독실한 그리스교도인들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교황이 잉여 공로를 팔아서 죄를 대신 씻어주면 구원받게 된다는 교리였다. 루터는 이와 같은 교리에 대하여 95개조의 반박문을 들어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였다.²⁾ 그 핵심은 죄의 사함은 교황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만 할 수 있다는 것과 진정한 참회는 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달게 받는 것이라는 것이다.

조계종 개혁불사의 시각에서 볼 때 루터의 종교개혁이 갖는 의미는 교황의 절대 권력과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혁파다. 1994년 개혁불사는 서의현 총무원장의 절대 권력과 한국불교와 세속정치의 결합에서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서의현 총무원장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에 걸쳐 종권(宗權)을 장악한 인물이었다. 그의 종권과 정부의 정권이 유착되어 발생한 사건이 상무대 사건이다.³⁾ 독재 종권에 대한 종도의 저항은 ‘민주화’라는 시대적 이념을, 정권과 유착된 상무대 사건은 ‘자주화’라는 시대적 이념을 담아서 개혁불사로 표출되었다.

1980-90년대 한국사회운동의 모토(motto)는 민주화와 자주화였다. 민주화는 군사정권의 독재에 대한 투쟁이었으며, 자주화는 한국의 미국 예속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개혁불사의 주체세력이었던 소위 운동권 승려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⁴⁾ 하지만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동안 군부독재의 힘을 빌려 종권을 향유해온 서의현 총무원장 체제가 균열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 운동권 승려들에게 있어서 군사정권의 독재에 대응하는 민주화와 한국의 미국 종속에 대응하는 자주화는 서의현 총무원장의 독재에 맞서는 민주화와 정부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주화와 같은 맥락의 문제였다.⁵⁾

그런데 민주화와 자주화는 세속사회에서는 절대성이 인정되는 개념이지만 불교교단에서는 깨달음과 열반, 그리고 청정과 수행 등의 탈세속적 개념이 절대성을 지닌다. 개혁종단의 이념으로 등장한 민주화와 자주화는 종단의 당면 과제를 투영한 시대적·사회적 정향(正向)의 제시였다. 하지만 개혁종단의 이념이 얼마나 종교적·불교적 정향을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그를 얼마나 실현하

2) 박규태 2010, 375-382.

3)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종권 장악과 상무대 사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선학』 제50호에 실린 조기룡의 「대한불교조계종 개혁종단의 이념 정체성과 승가교육의 정향(定向)」을 참고하기 바란다.

4) 조기룡 2018, 14.

5) 앞의 논문, 14-15.

였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⁶⁾ 이에 본고는 개혁종단이 가진 탈세속성 측면에서의 현재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I. 개혁종단의 한계

1. 정책모임의 대두와 종단정치의 과잉

종교조직에도 정치는 존재한다. 하지만 종교의 이념을 벗어난 종교조직의 정치는 내부적 갈등과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 종교조직의 정치는 해탈·구원 또는 자비·사랑 등의 탈세속적 이념을 지향하기 위한 대내외적 활동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종교조직 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략적 활동을 한다면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생기고 사회적으로는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이 중앙총회다. 국가정치 일번지가 국회라면 조계종의 정치 일번지는 중앙총회다. 중앙총회에서 종단정치를 이끄는 주체는 소위 계파라고 불리는 정책모임이다. 계파가 종단정치에 등장한 것은 개혁회의가 활동을 종료 후 제28대 총무원장(1994-1998년, 월주)을 선출하는 시기부터로 보인다. 당시 월주와 월탄이 각축전을 벌였는데, 중앙총회가 종단개혁실천회(이하 종실)와 종단발전연구회(이하 종발)로 갈라져 각 후보를 지지하였다. 종실은 종단개혁을 이끌었던 승려들이 중심을 이룬 모임으로 월주를 지지하였으며, 종발은 서 원장의 3선에 조력했다가 막바지에 종단개혁에 참여했던 승려들이 포함된 모임으로 월탄을 지지했다. 이것이 현행 조계종 ‘계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종단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확고한 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수를 점하고자 계파가 형성된 것이다.⁷⁾

이와 같이 1994년 개혁종단 출범과 함께 형성된 중앙총회의 계파는 과거 문중 주도의 종단정치를 계파 주도로 바꾸어 놓았다. 그동안 여러 계파들은 총무

6) 앞의 논문, 15.

7) 법안 2014, 28.

원장 선거를 중심으로 명칭을 바꾸며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중앙총회의 계파는 종단의 입법은 물론 총무원장 선출에 따른 종권의 향배에 따라 세(勢)를 형성하면서 종단의 정치를 주도해왔다.⁸⁾

조계종의 계파는 종단정치의 과잉을 초래한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의 이해를 위해서는 종단정치와 그 과잉이 갖는 의미와 계파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종단정치란 일반정치의 개념을 원용할 때, ‘종단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또는 ‘종단의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과 권력을 얻거나 늘이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교섭하고 정략적으로 활동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들을 기반으로 종단정치의 과잉을 해석하면, 종단운영의 전반에 걸쳐서 이해관계의 조정과 통제를 위한 교섭과 정략이 필요 이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종교조직이라 할지라도 정치행위, 즉 이해관계의 조정과 통제, 그리고 이를 위한 교섭과 정략은 필요하다. 문제는 정치행위가 종교조직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냐는 것이다.

개혁종단에서 종단정치의 주체는 중앙총회이고, 중앙총회의 정치 동력은 정책모임이다. 개혁회의가 종권의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든 여러 제도, 특히 각종 선거의 도입은 종단의 정치모임들이 연합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정책모임은 그 결과 형성된 것이다. 정책모임은 개혁종단에서 생산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성립되었지만 점차 정책 활동이 약화되면서 계파가 되었다. 월정사주지인 정념은 총무원장 선거에 의한 정치과잉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총무원장 선거는 금권선거, 매관매직 선거, 연고정치에 따른 기득권 세력의 갈라먹기 밖에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⁹⁾ 총무원장 선거의 승자 측에 속하면 종단과 사찰의 주요 소임을 맡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부(富)로 연결되고는 한다. 정념은 승가의 갈등과 분열 나아가 승자독식을 유발하고 있는 총무원장 선거를 정치과잉의 대표적 현상으로 손꼽은 것이다.

8) 앞의 논문, 33.

9)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7> (검색일: 2021.07.09.)

그런데 총무원장 선거권자들의 대부분은 종책모임에 속해있다. 이는 종책모임을 정치과잉의 주요 주체로 인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제는 종책모임의 존재 가치를 물어야 할 때다. 그 결과 종책모임이 종권의 획득과 기득권의 유지를 위한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과감히 해체를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종책모임의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종책을 입안하고 이를 관철시켜 종단발전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모임으로 다시금 새로이 출발해야 한다.¹⁰⁾

2. 종단개혁의 세속성

종단개혁의 궁극은 종교성에 맞추어져야 한다. 조직과 인사, 재무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종교성의 회복 또는 강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종단들은 각 종파의 핵심이 되는 교의인 종지(宗旨)를 가지고 있다. 종지의 실현이 각 종단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단개혁의 궁극은 종지의 실현에 있어야 한다. 조계종의 종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받들어 체득하고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이다.¹¹⁾ 이는 곧 수행과 포교다. 직지인심과 견성성불은 수행이고 전법도생은 포교다.

개혁종단의 개혁은 과연 조계종의 종교적 궁극점인 종지를 향하여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혁종단의 목적은 ‘불교의 자주화’와 ‘종단의 민주화’로 집약된다. 개혁종단의 목적이 불교의 자주화와 종단의 민주화였음은 개혁회의가 제시한 3대 개혁과제와 불교개혁 5대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직의 목적은 과제와 지표 등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주화와 민주화가 종교조직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3대 개혁과제는 ① 불교자주화 ② 제도개혁 ③ 인적청산이다.¹²⁾ 민주화가

10) 앞의 논문, 42.

11)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http://www.buddhism.or.kr/jongdan/sub1/sub1-3-t2.php> (검색일: 2021.04.11.)

12)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16, 179.

과제로 직접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②번 제도개혁의 방향이 참종권 확대,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확보, 총무원장 선거인단 구성, 교구분권 등 중도를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 즉 민주주의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제도개혁을 곧 민주화로 인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①번 불교자주화와 ②번 제도개혁은 개혁종단의 목적이 자주화와 민주화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개혁회의가 설정한 3대 개혁과제에서 수행과 포교라는 종교적 목적을 찾기는 힘들다.

불교개혁 5대 지표는 ① 정법종단의 구현 ② 불교자주화 구현 ③ 종단운영의 민주화 ④ 청정교단의 구현 ⑤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 등이다. 각 지표들에는 실천을 위한 세부사업들이 있었다. 종교적 목적인 수행은 정법종단의 구현에 ‘수행가풍의 진작’이라는 세부사업으로 포함되었다. 포교는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에 ‘포교의 활성화’라는 세부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그런데 불교개혁 5대 지표 중 청정교단의 구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정교단의 구현에 따른 세부사업들은 해종행위자 정화, 부당처리된 징계의 재심의, 비법적 운영사찰의 숙정(肅正), 부당한 인사정책과 관행의 시정이었다. 개혁종단의 청정교단 구현이 수행 진작이 아닌 인적 청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종교개혁은 탈세속적 성스러움을 지향해야 타당함에도 개혁회의는 해종행위자 정화와 비법적 운영사찰의 숙정에 주력한 것이다. 이러한 인적 청산은 당시의 현실적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개혁종단의 종단개혁을 세속적으로 만든 주요 요인이 되었다.

상기의 과제와 지표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개혁회의의 지향점은 불교의 자주화와 종단의 민주화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94년 종단개혁 백서』에서 스스로 1994년 종단개혁을 ‘불교 자주화와 민주화의 여정’으로 명명하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혁회의의 종단개혁은 인적 청산을 통한 불교 자주화와 종단 민주화의 과정이었고, 이를 위해 3대 개혁과제와 불교개혁 5대 지표가 설정되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¹³⁾

3. 승가의 갈등과 분열

승가의 생명은 화합이다. 불가(佛家)에서 승가를 ‘화합승(和合僧)이라 일컫고, 화합을 깨는 행위를 승가의 가장 큰 범계인 5역죄로 다스리는 데서 승가가 화합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¹⁴⁾ 그런데 화합의 전제는 평등이다. 한 조직에서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조직 내에서 불만은 생기기 마련이며, 이러한 불만은 조직을 갈등과 분열로 이끌 수밖에 없다. 이에 본장에서는 개혁종단에서 이루어진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인 징계의 불공정과 승가의 부익부 빈익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징계의 불공정

개혁종단이 출범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 수반될 정도로 갈등하고 분열하였음은 당시의 각종 방송보도와 언론기사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개혁종단 출범 과정보다는 그 동안 조명이 부족했던 출범 후의 갈등과 분열 상황에 대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개혁종단의 주체세력인 개혁회의는 3대 개혁과제와 불교개혁 5대 지표에서 ‘인적 청산’을 선언하였다. 인적 청산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람을 조직에서 징계하거나 쫓아내는 것인데, 청산의 대상자가 승복하지 않는다면 갈등과 분열은 불가피하다.

개혁회의의 인적 청산이 미친 승가의 갈등과 분열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당시 징계자 특히 체탈도첩과 제적 등 중징계의 내용과 절차가 평등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혁회의는 중징계자들에 대하여 ‘등원공고(1994.5.12.)’, ‘초심호계위원회 개최 공고(1994.6.1.)’, ‘재심신청공고(1994.6.8.)’, ‘재심호계위원회 개최 공고(1994.6.23.)’, ‘징계결의 확정 공고(1994.7.1.)’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체탈도첩 및 제적의 징계를 진행하였다. 당사자들에 대한 통고는 『불교신문』에 공고하는 방식이었다.¹⁵⁾ 그러나 중징계자들 가운데는 개

13) 앞의 책, 181.

14) 조기룡 2017, 60.

1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16, 222-228.

별적 출석 통보를 받지 못했다거나, 징계사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가 없었다거나, 초심호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통보하고 징계 사유를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알려주지 않은 채 당사자 없이 꺾석 징계를 하였다거나, 징계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¹⁶⁾

징계에도 불구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때는 징계에 참회가 따를 때다. 그런데 참회는 징계자가 자신의 징계에 대하여 승복해야 이루어진다. 그런데 자신이 징계 내용과 절차를 제대로 납득하지 못한 채 승가의 가장 중형인 체탈도첩 내지 제적을 당하였다고 생각된다면, 그 징계에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참회가 따르기 힘들고 화합도 그만큼 이루기 어려워진다. 이 대목에서 참회가 있기에 승가에서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개혁종단 출범 후 종단화합을 위한 조치를 논의함에 있어서 1994년 멸빈자에 대한 사면·복권 문제는 매번 등장하였다. 2015년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멸빈 징계를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하였고, 2020년 그의 분한신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승적을 복권해주고 대종사의 법계를 품수하였다. 그러나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감형과 복권에 대하여 ‘특정인 봐주기’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 서 전(前) 원장 이외 나머지 멸빈자 및 징계자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은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사면과 복권이 ‘봐주기’가 아닌 ‘대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당시의 징계의 내용과 절차를 돌아보고 이제라도 적법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면과 복권이 ‘봐주기’가 아닌 ‘대화합’의 조치가 되어야 참다운 승가의 화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징계에 대한 재평가도 수반되어야 한다.

2) 승가공동체의 경제적 불평등

현재 조계종에서는 승가공동체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그 핵심은

16) 이자량 2018, 364.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다. 사회 내에서 개인들이 평등한 지위를 갖지 못한 상태를 사회 불평등이라 한다. 사회 불평등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갈등과 분규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경제적 불평등은 소유의 불평등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승가에서도 소유 문제는 공동체의 화합 유지를 위한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¹⁷⁾

2013년 조계종은 종단 차원 최초로 <승가청규(僧伽淸規)>를 제정하였다. 청규는 승려의 의식주 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규범인데, 그 조문들은 당대의 승가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2013년 <승가청규>는 한국승가에 사회의 일반적 생활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경제적 부를 소유한 승려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¹⁸⁾ 이 <승가청규>는 승려의 의(衣)·식(食)·주(住)에 있어서 비단 등으로 만들어진 고급 승복 착용 금지, 수행자의 품격에 맞지 않는 음식점의 출입과 고가의 차(茶) 금지,¹⁹⁾ 크고 화려한 주거 공간과 값비싼 숙박시설 투숙 금지²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 고가 자동차의 사용, 주식과 펀드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투자나 사행성 투기, 개인명의 부동산의 소유, 지나치게 비싼 생활용품이나 기호식품의 사용, 고비용의 레포츠를 금한 일상생활에 대한 조문은 승가의 부익부 빈익빈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준다.²¹⁾

근래 한국승가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일반사회에서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주시 받는다. 승가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현존하며, 이로 인하여 평등해야 할 승가 공동체에 차별적 경제 계층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승가의 갈등과 분규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승가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형성된 개혁종단의 현실에서, 정재(淨財)인 시주물은 욕망과 집착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평등공동체인 승가에서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적게 갖는 불평등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 화합공동

17) 조기룡 2017, 63.

18)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 2013, 67-75.

19) 앞의 책, 70.

20) 앞의 책, 71.

21) 앞의 책, pp.74-75.

체인 승가가 서로 시기하고 질시하는 파승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²²⁾

4. 행정 중심 종단운영

종단조직에서 종무행정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개혁종단 출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무행정의 체계화와 안정화는 성과에 해당한다. 종무행정이 종권의 변화에 따라서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통합전산망과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체계적 종무행정이 가능해졌다.²³⁾ 하지만 종단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있는 형국임도 부인하기 힘들다. 불교종단의 궁극적 목적은 수행과 전법이 되어야 한다. 조계종의 종지가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이기에 개혁종단은 수행과 전법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종무행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단개혁의 주체들은 종헌과 종법에서 종단권력구조와 관련된 제반 제도를 전면 쇄신하여 개혁하고자 하였다. 종교적 개혁보다는 행정적 개혁에 치중한 것이다. 수행과 전법의 회복보다는 중앙종무기관의 권력분산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제도와 체제 변화에 주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법체계와 사회의 조직운영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종단조직의 종교적·불교적 정체성은 퇴색하고 세속화는 진전되었다.²⁴⁾

개혁종단은 개혁회의 해체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무행정 체계화를 위한 감사제도, 전산화, 성과평가제도 등 기능적 측면 강화를 개혁과 발전으로 간주하고 추진해왔다.²⁵⁾ 그러나 정부와 사회의 체계와 운영을 모방한 개혁종단의 세속적 개혁은 중앙의 행정제도는 혁신하였지만, 종교조직으로서 불교종단의 정체성을 살리는 성찰과 개혁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의 제도와 체계를 모방함으로 인하여 정부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중앙종무기

22) 조기룡 2017, 66.

23) 현웅 2014, 13-14.

24)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계본부 2019, 79-80.

25) 앞의 책, 80.: 이와 같은 기능적 강화마저도 종단 전반에 걸쳐 시행되지 못하고 종단중앙의 변화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관에서 노정되었다. 관료화는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중앙종무기관은 관리와 감독 중심의 행정조직이다. 그러다보니, 일선의 사찰과 승려, 신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서 안내하고, 지원하고, 충족시켜주기 보다는 관리와 감독으로 통제하려 하였다. 중앙종무기관이 일선의 필요 사항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이런 현상은 자칫 종무행정을 탁상행정으로 그치게 할 수도 있다.

IV. 개혁종단의 과제

1. 종교적 정체성의 회복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조계종은 제도와 운영의 체제 혁신을 통해 괄목할 변화를 가져왔다. 삼권분립의 단초가 되는 대의제가 정착되었고, 전산화를 기반으로 종무행정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종단의 재정은 1994년 이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고, 사찰의 수도 3배 정도 늘었다. 이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 한국문화연수원, 국제선센터의 건립 등 외형 면에서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였다.²⁶⁾

그러나 1994년 종단개혁이 제도의 민주화와 운영의 현대화에는 기여했지만 오히려 조계종의 종교적 정체성은 약화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종교적 정체성의 약화는 종단의 세속화를 지칭한다. 종단의 정치와 행정의 과잉으로 인한 수행과 전법의 약화라고 할 수 있다. 종단의 민주화로 인하여 정치가 과잉되었고, 운영의 현대화로 인하여 행정이 과잉되면서 수행과 전법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은 오히려 퇴색했다는 것이다.

개혁종단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수좌인 휴암(休庵, 1941~1997)의 주장은 현 조계종의 종교적 정체성 회복에 조언이 될 수 있다. 휴암이 29년간의

26) 앞의 책, 75.

수행 생활을 통해 일관되게 추구한 것은 생사의 사바세계로부터의 인간구제였다. 그는 생사해탈이야말로 불교의 영원한 핵심 주제라 갈파하고, 그것은 선(禪)의 정신과 온전한 깨달음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민주화, 자주화 등의 ‘방편’을 강하게 비판하고 배척하였다. 그러한 방편은 타성과 미혹을 일상화하여 사람들을 생사윤회에 더욱 함몰시키기 때문에 반불교적 역기능을 심화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불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불교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지향하는 승가 정신이 바로 설 때, 비로소 불교는 인류 사회에 산 종교로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²⁷⁾

휴암은 조계종의 종교적 정체성 회복을 제도개혁이 아닌 ‘중 정신’으로의 의식전환에서 찾았다. 그는 개혁회의의 종단개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지금은 정치종단의 색채가 압도적이고 수행종단의 색채는 풀이 죽은 상태다. ...중략... 중 정신으로 돌아감이 없는 제도개혁은 수고만 있을 뿐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개혁이 종단의 정치적 효용을 제고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 조계종 개혁은 영영 걸돌 수밖에 없다.²⁸⁾

휴암은 종단이 정치색채가 지나침을 비판하면서 중 정신으로 돌아가야 조계종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중 정신이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출가 승단의 암은, 불교사상과 가치관의 발병(發病)은 다른 데가 아닌 바로 개혁을 외치는 교육됐다는 젊은 여러분들 자신 속에서 이미 현세주의적·물질주의적 오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로 여러분들 자신들의 내부에 있는 그 물질적 오염을 근원적으로 개혁할 자세가 돼 있는가가 개혁의 바른 눈을 뜨는 것이다. ...중략... 한국

27) 박경준 2012, 298-299.

28) 김광식 2018, 139에서 재인용.

불교는 중 정신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나 이미 물질주의에 오염된 한국불교는 그것을 절감할 기력을 상실했다!²⁹⁾

휴암은 젊은 승가의 현세주의적·물질주의적 오염이 승단의 암이라고 지적하면서, 중 정신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승려의 내부에 있는 물질적 오염을 근원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중 정신이란 세속화된 사유를 버리고 탈세속적 사유를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비록 휴암 개인의 의견이지만, 종단의 세속화로 인한 각종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추어볼 때 조계종의 종교적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조계종의 종교적 정체성은 물질세계가 아닌 정신세계에서 찾아야 한다. 그 정신세계는 수행을 기반으로 한 세계다. 조계종은 근원적으로 선(수행)을 표방하는 종단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조계종은 현실세계의 세대적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세계의 측면에서 세상, 사회, 중생을 구제한다는 불변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조계종은 개혁회의가 표방한 불교의 자주화와 종단의 민주화가 불교조직의 본질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로 우선 나아가야 한다.

이에 현재 필요한 것은 승풍진작(僧風振作)과 종풍쇄신(宗風刷新)이다. 승가의 수행가풍을 떨쳐 일으키게 하고, 종단의 폐단을 없애 새롭게 함으로써 조계종의 종교적 정체성을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승풍과 종풍은 부처님 법에 맞아야 한다. 승가와 종단이 부처님 법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승가의 가치관이 세속 범부의 물신주의와 향락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종단의 운영은 세속 사회의 정치적 논리를 탈피해야 한다. 조계종이 승가 가치관과 종단 운영의 목적을 부처님 법에 맞게끔 수행과 전법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종단이 불교조직으로서 참다운 종단개혁을 실현하는 것이자, 부처님 법대로 살고자 한 불교정화운동을 현재에 다시 올곧게 실천하는 것이다.

29) 앞의 논문, 139-140에서 재인용.

2. 화합공동체의 실현

승가는 공동체다. 승가가 열반과 해탈, 그리고 중생구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화합해야 한다. 본고 II장에서는 승가의 화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종책모임의 과잉, 징계의 불공정, 승가의 부익부 빈익빈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장에서는 개혁종단이 승가의 화합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계파의 종책기능 강화 ② 징계자의 재심 ③ 경제적 평등을 강구하고자 한다.

1) 계파의 종책기능 강화

종책모임 즉 계파가 개혁종단의 파당 형성에 핵심이 된 상황이지만, 본래는 중도의 의견을 대신 전하는 중회의원으로서 대의(代議)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고자 한 순기능적 목적이 있었다. 계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계파의 해체고, 둘째는 순기능의 강화다. 계파의 해체를 논함에 있어서는 그 가능성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계파는 스스로 그 역기능을 인지하고 자진해서 해체를 선언한 적이 있었다. 2008년 금강회가 해체를 한 적이 있었으며, 2012년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승려도박 사건을 계기로 무량회, 무차회, 보림회 등이 해체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총무원장 선거를 전후로 계파는 이내 다시 구성되었고 파당적 양태도 지속되고 있다.

조계종단 내에는 파당을 금하는 승가의 전통적 인식으로 인하여 계파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존재한다. 이런 정서에 더하여 요즘에는 종단의 각종 선거로 인한 폐해가 계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이 드러나면서 반감이 깊어지고 있다. 개혁종단의 주체들 사이에서 마저 계파로 인한 문제들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러한 걱정, 부정적 정서, 그리고 반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계파의 해체는 요원한 문제다. 현행과 같이 선거로 종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종단구조 하에서는 종권을 지향하는 계파의 결성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만일 계파의 해체가 요원한 문제라면, 그 순기능의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 계파가 본래 결성 목적인 종단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종책모임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계파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계파가 개인적 유대관계에 의한 사적인 활동과 이익의 추구가 아닌 종도의 이익과 종단의 발전을 위한 종책모임임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인식의 개선을 전제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과제는 종책선거다. 현재 종단의 주요 선거들은 공약보다는 계파와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의해 치러진다. 선거에서 종책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종책모임이 굳이 종책의 연구와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이러한 선거풍토는 종책모임을 계파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계파가 종책모임이 되기 위해선 종책의 개발과 입안이라는 대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계파의 구성원들이 종도들의 요구사항과 종단의 필요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서 종책으로 개발하여 중앙총회에 입안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종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계파가 아닌 종책모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 징계자의 재심

개혁종단의 징계자 문제는 고령이 된 당사자들에 있어서도 절박하지만, 종단은 승가화합이라는 원칙적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당시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초심호계위원회 위원조차도 개혁종단의 징계 절차에 한계 내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³⁰⁾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영담은 『불교신문』이 2014년 주최한 ‘종단개혁 2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징계범위를) 너무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최소화하고 또 최소화했다. 어렵게 인적 청산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고, 과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징계과정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고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리고 초심호계위원회 위원이었던 철우는 “아무리 의현 총무원장의 편에서 있었던 사람이

30) 「28. 해종행위자 징계」, 『법보신문』, 2014.10.08.,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854> (검색일: 2021.03.11.)

라도 징계는 적법하게 진행돼야 훗날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호계위원회의 판결은 마치 ‘인민재판’을 연상케 했다. 절차와 원칙도 없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게 됐다”고 술회했다.

개혁 주체 일부의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개혁 주체들은 징계가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강조해왔다. 반면 입장을 달리 하는 사람들은 징계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견차는 승가의 화합을 위한 노력에 의해서만이 줄어들 수 있다. 즉 ‘재심’이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자료들을 수집한 후 양쪽 당사자나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확인 작업을 거쳐서 공정한 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막연히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선심 쓰듯이 사면과 복권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재조사를 함으로써 개혁 주체들의 징계가 정당했음을 다시 한 번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절제되지 못한 감정 등으로 인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그에 맞게 절차를 새로이 밝으면 될 것이다.³¹⁾

3) 승가공동체의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평등은 소유와 분배의 문제다. 경제적 불평등은 소유가 불평등한 것이고, 이는 분배의 불공정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공동 소유’와 ‘평등 분배’를 승가의 원칙으로 정하였다.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승가에 기증된 것 중 옷과 음식 등 나누어 분배할 수 있는 가분물(可分物)은 모두 현전승가의 공동 소유로 하였다. 토지나 정사 등 나누어서 분배할 수 없는 불가분물은 모두 사방승가의 공동 소유로 하였다. 이외 시주자가 개인에게 시주한 것³²⁾ 승가로부터 개인 몫으로 분배받은 것만을 개인 소유로 인정하였다.³³⁾ 그

31) 이자량 2018, 367-368.

32) 개인에게 시주한 모든 시주물에 대하여 그 소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율장에 의거하여 승려에게 소유가 허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33) 이자량 2012, 13-14.

리고 분배는 공평한 분배와 법납에 따른 분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공평한 분배는 승려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 후 상좌와 하좌를 구별하지 않고 양적·질적으로 최대한 똑같이 분배하는 원칙이다.³⁴⁾ 법납에 따른 분배는 나누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등 공평한 분배가 어려운 경우 법납의 순서에 따라서 분배하는 원칙이다.³⁵⁾

현재 조계종의 경제적 불평등은 승가의 소유와 분배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승가 공동체의 소유인 불가분물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기도 하고 개인적 소유가 가능한 가분물에 대한 분배는 불공평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승가 내에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승가의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는 것이다.³⁶⁾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의 승가가 경제적으로 화합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와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찰재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사찰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승가의 소유와 분배는 한결 평등해질 수 있다.

사찰재정의 투명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가 개혁종단이 제도으로써 사찰 내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사찰운영위원회의 실질화다. 개혁종단은 사찰재정의 공개를 통한 공정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모든 사찰에 사찰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종헌·종법으로 명시하였다. 사찰운영위원회는 승려와 신도로 구성되고,³⁷⁾ 사찰의 예산·결산, 사찰 예산 외 특별불사와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사찰부동산의 처분 승인신청 및 기채의 승인신청, 신도의 상벌, 사찰 자체감사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³⁸⁾ 그러나 상당수의 사찰에서 사찰운영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지가 절대적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주지의 뜻에 반하는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적지 않다. 이에 사찰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사

34) 앞의 논문, 25.

35) 앞의 논문, 30.

36) 조기룡 2017, 72.

37) <사찰운영위원회법> 제2조

38) <사찰운영위원회법> 제5조

부대중의 형식적 구성에서 나아가 내용적으로도 평등한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행 독립채산제 형태의 사찰운영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고착화시키고 있기 때문에³⁹⁾ 중앙집권식 재정 체제로의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조계종 사찰의 재정 시스템은 자신의 수입을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말사의 수입금을 전액 중앙으로 보낸 후 중앙에서 다시 말사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현실적 방안을 고민해 보면, 중앙종단이 개별 승려의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사설사암을 통제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공찰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그리스도교의 가톨릭과 한국불교의 천태종이 중앙집권식 재정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계종에서는 독립채산제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중앙집권식 재정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비구니와 재가자의 참종권 확대

‘사부대중공동체’는 개혁종단의 종단개혁 과정에서 애용된 말이다. 이 말에는 종단이 비구와 비구니 그리고 우바새와 우바이가 목적과 행동을 같이 하는 집단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1994년의 종단개혁은 비구뿐만 아니라 비구니와 우바새·우바이가 함께 한 성과였고, 사부대중공동체는 이를 확인하는 말이었다.

종단개혁 당시 학인 승려에서 소장과 중진에 이르기까지 비구니들은 전경과의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중요한 주축으로 참여하였다. 비구니는 개혁종단에 개혁회의 내에서 비구니 지위와 위상 정립, 종헌·종법에 비구니 차별 조항 철폐, 비구니 수에 걸맞은 종회의원 확보, 총무원에 비구니 부서 설치, 비구니의 중앙과 본사 종무행정 참여 등 참종권의 확대와 비구니 차별의 개선을 요

39) 설정 2014, 13.

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구니의 요구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고 대부분은 실현되지 못했다.⁴⁰⁾

비구니의 참종권과 함께 개혁종단에 제기된 비판이 재가신도의 참종권이다. 종단개혁 기간에 많은 재가신도들이 밤낮으로 구종법회(求宗法會)를 지원하고 각종 행사에 대거 참여하면서 종단개혁에 힘을 실어주었다.⁴¹⁾ 각계의 재가신도들은 연일 열리는 집회 참가는 물론 정부관계기관 방문, 시민사회단체 연대사업 등을 통해 종단개혁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가신도들은 서의현 원장 퇴진 후에도 종단개혁에 제도적으로 동참하여 불교의 근본정신에 입각한 불교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⁴²⁾ 그러나 개혁종단은 재가신도를 조력자 내지 외호집단으로 한정하고 재가신도의 중앙총회 참여 등 종단운영주체로서의 참종권은 배제하였다. 출가자인 비구니의 참종권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가신도의 참종권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혁종단이 출범한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현재에도 사부대중공동체의 실현은 여전히 난제다. 2015년 조계종은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하여 ‘사부대중공동체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두고 출가와 재가가 논의를 하였다. 비구니의 참종권에 대해서는 비구니의 종단 내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커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재가신도의 종단운영 참여에 대해서는 출가와 재가 간 인식차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출가자는 재가자들이 ‘승가 외호’에 전념해야 한다고 봤고, 재가자는 ‘종단 및 사찰 운영에 출·재가가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사찰이 사부대중의 공동체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출가자가 재가자를 불교교단 공동체의 평등한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는 신행적 관점에서는 출가가 재가에 대하여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 그러나

40)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16, 246-247.

41) 앞의 책, 247.

42) 김봉준 2001, 231-232.

사찰경영적 관점에서 양자는 순치(脣齒)의 보완적 관계이다. 그러나 한국불교에서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는 사찰경영적 관점에서조차도 상당부분 수직적·종속적 관계다. 신형적 위치가 경영적 위치에 그대로 고착화된 것이다. 출가자가 자신을 성직자가 아닌 수행자로 자각할 수 있을 때 한국불교에서 붓다가 그토록 혁파하고자 했던 바라문적 신분질서가 사라지고 출가자가 재가자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⁴³⁾

4. 종단조직의 재정비

종단조직은 종교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조직으로서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단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 조계종은 불교종단의 목적인 종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되고 가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계종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 즉 수행과 전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개혁종단은 총무원 소속이었던 호계위원회를 사법부인 호계원으로 독립시켜 삼권분립의 종단 체제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행정부도 과거 총무원 단일 체제에서 산하의 포교원을 독립시키고 교육원을 신설하여 3원 체제를 형성하였다. 삼권분립과 3원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종단조직의 구조는 정부조직인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체제에 종교조직의 특성을 살려 교육원과 포교원을 설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이를 재평가해보면, 종단은 종교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대목의 문제는 중앙종무기관에 행정은 있으나 수행과 전법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 제기가 중앙종무기관이 직접 수행과 전법의 현장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행정 자체가 아닌 수행과 전법이 종단조직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수행과 전법을 위한 행정이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에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43)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423> (검색일: 2021.07.09.)

개혁회의의 기획실장을 맡았었고, 개혁종단 출범 이후에는 제6대와 제7대 교육원장으로서 10년 간 승가교육을 이끈 현응의 종단조직 재정비에 대한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종단의 기본적 역할을 첫째, 사찰의 삼보정재를 엄정히 보호 관리하는 일, 둘째, 승려의 기본적 복리를 뒷받침 하는 일, 셋째, 승려들이 종단과 사찰을 기반으로 수행과 전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제시했다. 그리고는 개혁종단이 세 가지 역할 중 첫 번째만을 그런대로 이루고 다른 두 가지는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⁴⁴⁾

그러면서 현응은 ‘승가수행전법 지원업무부서’를 주요한 비중을 두어 설치하고, 전문종무원을 대거 배치하여 운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승가수행전법 지원업무부서가 수행과 전법을 위한 행정 지원은 물론 의료지원, 연금지원, 숙사조성 및 관리지원들을 전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나아가 중앙종무기관의 승가수행전법 지원업무는 현장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상 교구본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결계(結果) 제도를 승가수행전법 지원업무와 연계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행정이 아닌 수행과 전법 본위의 중앙종무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본고의 주장과 상당 부분 맥을 같이 한다.⁴⁵⁾

현응은 수행과 전법을 아울러 향후 조직 재정비 과제를 제시하였지만 본고는 전법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의 포교원은 산하 조직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지 포교를 고민하고 현장에 가서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기관은 아니다.⁴⁶⁾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조직은 최소화하고 포교 대상별로 세부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는 행정에 머무르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농촌, 도시, 어촌, 직장, 가정 등 분야별로 세부적 포교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포교원의 교역직과 일반직 종무원들이 일선 사찰

44) 현응 2014, 18.

45) 앞의 논문, 21.

46)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계본부 2019, 141.

이나 기관과 단체에 나가서 이를 교육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하고 들은 내용을 다시 피드백해서 전략과 전술을 가다듬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⁴⁷⁾

조계종이 행정이 아니라 수행과 전법에 충실한 종교조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은 물론 중앙종회와 호계원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체를 재정비해야 한다. 물론 형체가 없지만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개혁종단이 정비한 조계종단도 마찬가지다.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의 행정이 중심이 되면 구성원의 관심도 행정에 쏠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붓다의 진리를 깨닫는 수행과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전법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을 만들면 구성원의 관심도 수행과 전법에 쏠리게 된다.⁴⁸⁾

V. 결론

개혁종단 출범 이후 조계종에서 개혁불사는 한동안 절대선(絕對善)처럼 여겨졌다. 개혁불사와 개혁회의, 그리고 개혁종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마치 해종행위처럼 간주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개혁불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자성적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정치와 행정의 과잉 그리고 종단의 세속화와 승가의 갈등이다. 개혁종단이 제도 개혁과 인적 청산에 치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혁종단의 모토(motto)인 민주화와 자주화는 당대의 시대적 요청이었다. 1990년대, 민주화는 군사정권의 독재에 대한 항거였는데 총무원장 3선 반대는 같은 맥락의 시대적 과제였다. 그리고 자주화는 한국의 미국종속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는데 불교종단이 정부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자주화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민주화와 자주화는 세속사회에서는 절대적 가치가

47) 앞의 책, 141.

48) 앞의 책, 142.

될 수 있지만 종교조직인 불교종단에서는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다. 불교종단의 절대적 가치는 수행과 전법이어야 한다.

개혁종단이 출범 이래 현재까지 시대적 요청이라는 명분으로 민주화와 자주화라는 세속적 가치의 실현에 주력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수행과 전법을 향한 종단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불교종단의 존재 가치는 붓다의 가르침 즉 교지(敎旨)의 실현이며, 수행과 전법이 곧 그것이다. 이제 조계종은 정치와 행정의 아니라 수행과 전법을 최우선 가치로 구현할 수 있도록 종헌·종법을 제·개정하고 종단조직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조계종의 종헌·종법은 정부의 헌법과 법령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세속의 조직이며, 헌법과 법령은 세속의 제도다. 개혁종단은 종단의 조직과 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종교성보다는 세속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종단조직과 종헌·종법이 더욱 세속화된 것이다. 종단이 세속화된다는 것은 종교조직으로서의 생명력과 지도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향후 조계종은 사회화와 세속화를 혼동하지 말고 탈 세속화를 통한 불교적 종교성의 회복에 임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혁종단이 조계종을 진정한 종교조직·불교조직으로 만드는 종단개혁이다.

참고 문헌 REFERENCES

◆ 이차 문헌 SECONDARY LITERATURE

- BEOB-AN (법안). 2014. 「종단 정치 권력구조의 흐름과 과제」 [“*The flow and tasks of Jogye Order’s political power structure”], 『종단개혁 20주년 기념 2차 세미나 / 개혁불사20년, 무엇이 변했는가』 (*2nd Seminar in Commemo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Jogye Order’s Reform / What Has Changed in 20 Years of Buddhist-work for Reform), Seoul: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The 2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Promotion Committee of Jogye Order’s Administrative Headquarters for 1994 Reform Buddhist-Work), 27-43.
- CHO, Ki ryong (조기룡). 2017. 「한국불교의 파승 원인과 한국승가의 화합 방안-대한불교조계종을 중심으로」 [“Causes of Disharmony of Korean Buddhism and Measures for Promoting the Harmony of Korean Saṃgha-From the Perspective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52, 59-84.
- _____. 2018. 「대한불교조계종 개혁종단의 이념 정체성과 승가교육의 정향」 [“Ideological Identity of the Reform Order within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and the Educational Orientation for the Community of Monks and Nuns”], 『선학』 (*Journal of Seon Studies*), vol. 50, 9-40.
- HYUN-EUNG (현웅). 2014. 「조계종단의 미래와 과제」 [“*The future and tasks of the Jogye Order”], 『종단개혁 20주년 기념 3차 세미나 / 종단 개혁불사의 과제와 전망』 (*3rd Seminar in Commemo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Jogye Order’s Reform / Challenges and Prospects of Jogye Order’s Reform Buddhist-Work), Seoul: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The 2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Promotion Committee of Jogye Order’s Administrative Headquarters for 1994 Reform Buddhist-Work), 11-26.
- JOGYE Order’s Committee for Reform of the Order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

2013.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Samgha Pure Rules for Conversion and Practice of the Great Compassion and Aspiration*], Seoul: 대한 불교조계종 출판사 (Jogye Order Publishing).
- JOGYE Order's Headquarters for Centennial Big Plan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계본부). 2019. 『대한불교조계종 화합과 혁신위원회 ‘한국불교, 새로운 100년 설계를 위한 제안-화합과 혁신위원회 기획위원회 활동 최종 보고서』 [**Jogye Order's Committee for Harmony and Innovation 'Korean Buddhism, Proposal for a New 100-year Design: Activities Final Report of Planning Committee*], Seoul: 백년대계본부 (Headquarters for Centennial Big Plan).
- KIM, Bong jun (김봉준). 2001. 「94년 불교개혁운동의 반성적 점검」 [*“Review of the Buddhism Reform Movement in 1994”], 『불교평론』 (*The Buddhist Review*), vol. 8, 216-234.
- KIM, Kwang sik (김광식). 2018. 「94년 ‘종단개혁’의 재인식-휴암의 ‘개혁세력 비판의 문건’을 중심으로」 [*“Re-awareness of ‘Jogye Order’s Reform’ in 1994-Focusing on Hu-am’s Document of Criticism to Reformers”], 『조계종단의 개혁과 정화의 제문제』 (**Problems of reform and purification of Jogye Order*), Seoul: 도서출판 중도 (Jungdo Publishing), 131-162.
- LEE, Ja rang (이자랑). 2012. 「초기불교승가의 소유와 분배」 [*“Possession and Distribution in the Early Buddhist Samgha”],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33, 7-43.
- LEE, J. 2018. 「종단 화합 조치의 필요성」 [*“The Need of Measures for Jogye Order’s Harmony”], 『조계종단의 개혁과 정화의 제문제』 (**Problems of Reform and Purification of the Jogye Order*), Seoul: 도서출판 중도 (Jungdo Publishing), 355-371.
- PARK, Gyeong jun (박경준). 2012. 「휴암(休庵, 1941~1997) 불교의 세속화, 기복화를 막아라」, [*“Hu-am(休庵), Stop the Secularization and the Praying for Blessing of Buddhism”], 『불교평론』 (*The Buddhist Review*), vol. 50, 296-318.
- PARK, Gyu tae (박규태) tr. 2010. 『세계종교사상사 3』 [*Histories des Croyances et des Idées Religieuses III*], 서울: 이학사 (Ehak Publishing).
- SEOL-JEONG (설정). 2014. 「개혁의 완성 그리고 불교의 미래」 [*“The Completion of

Reform and the Future of Buddhism”], 『종단개혁 20주년 기념 2차 세미나 / 개혁 불사20년, 무엇이 변했는가』 (*2nd Seminar in Commemo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Jogye Order's Reform / What Has Changed in 20 Years of Buddhist-work for Reform), Seoul: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The 2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Promotion Committee of Jogye Order's Administrative Headquarters for 1994 Reform Buddhist-Work), 5-15.

The 2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Promotion Committee of Jogye Order's Administrative Headquarters for 1994 Reform Buddhist-Work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16. 『종단개혁 20주년 기념 94년 종단 개혁 백서』 [*A White Paper on 1994 Order Reform for Celebrating the 20th Anniversary], Seoul: 대한불교조계종 출판사 (Jogye Order Publishing).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854>

<http://www.buddhism.or.kr/jongdan/sub1/sub1-3-t2.php>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7>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423>

Limitations and Tasks of the Reform Order of the Jogye Order

Cho, Ki-ryong

Associate Professor, the Academy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Seoul)

The reform of the Jogye Order in 1994 completed the current order structure. Since then, the ideology and performance of the Reform Order have been regarded as absolute and negative evaluation has been forbidden. However, in recent years, objective evaluation of the Reform Order has been gradually ma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jectively present the limitations and tasks of the Jogye Order, thereby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the ambience and structure of order management system suitable for a new era.

This paper presented the limits of the Reform Order in the following four ways: First, due to the factions that emerged with the start of the Reform Order, politics has overflowed within the order, while religiosity has been lost. Second, the democratization and independence aimed by the Reform Order are the absolute values of secular organizations, not of religious organizations. Third, political and economic inequality occurred in the *samgha* as the Reform Order was devoted to the liquidation of opponents and the settlement of the electoral system. Fourth, the Reform Order focused on administrative reform, not on religious reform.

This paper presents the following four tasks: First, the present Jogye Order should focus on the renewal of the *samgha* spirit, not on the institutional reform. Second, the harmony of the *samgha* must be pursued through 1) the dissolution of the factions, while strengthening positive function of them, 2) reconsideration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in 1994, and 3) the realization of equality in possession and distribu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urrent *bhikṣu*-centered order management so that *bhikṣuṇīs* and lay believers can participate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Order and temple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central organizations so that higher priority can be given to spiritual practice and propagation, not to administrative system.

Keywords

The Reform Order, The Reform Council, Buddhist-work for reform,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Faction, Order Policy Meeting, Administration of the Order Affairs

2021년 07월 11일 투고
2021년 09월 13일 심사완료
2021년 09월 13일 게재확정

